

투데이 칼럼

북한과 핵확산 금지조약 NPT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즉 핵확산 금지조약은 핵 확산을 막기 위해 체결된 조약이다. 1968년 53개 나라 대표에 의해 체결됐다. 정식 이름은 '핵무기 확산방지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핵무기 보유가 확산되자 이를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본부는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 있다. NPT 기준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 러시아(옛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5개 나라다.

5개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기도 하다. 5개국의 최초 원자폭탄 실험은 미국 1945년, 소련 1949년, 영국 1952년, 프랑스 1960년, 중국 1964년이다. 이들 나라 외에는 모두 핵무기 비보유국이다.

'핵무기 비보유국'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아야 한다. NPT에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만 가입해 있다.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3개국 외에는 모두 가입해 있다.

인도는 1974년에, 파키스탄은 1998년에 처음으로 핵실험을 했다. 이스라엘은 핵실험을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1966년부터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핵보유국'은



정복규  
논설위원·통일교육원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나라다. 반면 북한은 사정이 다르다. 북한은 그동안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인도나 파키스탄은 핵무기 실험을 한 뒤에도 유엔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 반면 북한은 핵실험을 할 때마다 유엔을 통해 제재를 받았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다. 반면 인도와 파키스탄은 애초에 NPT 가입을 거부했다.

미국은 제재와 압박을 견디면서 핵무기 제조 권리를 지킨 것이다. 당시 북한은 전력난 해소를 위해 소련으로부터 원전 기술을 도입하는 조건과 소련의 권유에 따라 NPT에

가입했다. 북한은 그러나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에 반발하면서 NPT 탈퇴를 선언했다. 그 뒤 경수로를 제공받기로 한 미국과의 제네바 합의로 NPT 복귀를 선언했다.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문제로 인해 제네바 합의를 파기되면서 2003년 NPT 탈퇴를 다시 선언했다. NPT 가입과 탈퇴를 상황에 따라 잇달아 반복한 것이다. 결국 유엔은 북한의 NPT 탈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핵무기는 1945년 8월 미국이 최초의 원자폭탄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이래,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위험한 무기로 인식되었다. 그럼에도 미국에 이어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이 핵 보유를 선언했다. 결국 강대국 사이에 핵무기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다. 그 뒤 18개 나라가 참여하는 제네바 군축회의가 열린 후 3년간의 협상 끝에 1968년 워싱턴, 런던, 모스크바에서 각각 조인했으며, 1970년 3월 발효됐다.

이 조약에는 미국, 소련, 영국 등 핵보유국뿐 아니라 비보유국을 포함한 53개 국 대표가 참여했다. 이 조약은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을 영속 화합과 동시에, 미국과 소련 등 핵보유국들의 군축 노력이 보이지 않음에 따라 비핵보유국의 반발을 사왔다.

NPT는 핵국가와 비핵국가 간의 차별적 구도 위에 세워진 불평등 조약이다. 비핵국가들은 핵무기 개발이나 획득이 절대 금지되고 사찰을 받아야 한다. 반면 핵국가들은 단지 점진적인 핵무기 감축에 노력하는 것만이 요구되고 있다.

NPT는 한 나라라도 탈퇴를 인정해 준다면 탈퇴 도미노를 일으켜 NPT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NPT 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이스라엘,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과는 다르다. NPT 체제 안에서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는 국제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다.

사설  
미국과 중국 양자택일 외교

미국과 중국 양자택일 외교 문제를 놓고 측각이 곤두서고 있다. 베이징 측의 강압적 행동은 대한민국의 집단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을 향해 노골적으로 미국과 멀리 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는 한국 내 사드 배치 당시 작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미국 또는 중국'을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겠다고 했다. 중국의 위협을 계속 경고하면서도 자율성을 강조한 것이다.

전임 트럼프 정부와는 사뭇 다른 방식의 접근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본부 연설을 통해 중국의 다양한 위협을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각국이 중국과 협력 가능한 영역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기후 변화 같은 전 지구적 대응이 필요한 영역을 중국과 협력 가능한 분야로 꼽았다. 다만 중국이 국제 규범을 물론 미국과 동맹국들이 공유하고 있는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처럼 중국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선택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에 대중 강경 노선 참여를 강하게 압박했던 것과는 달랐다.

블링컨 장관은 나토 설립의 주요 근거인 집단 방위 조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동맹에 대한 미국의 책임도 강조했다. 미국은 현장 5조를 포함해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흔들리지 않는 협력을 다짐했다.

나토 동맹들과 이를 재확인했다. 해당 조항은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을 전체 회원국 침공으로 간주해 집단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바이든 정부의 대외 정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설 화법 정책과 다르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외교적 수사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런 만큼 대한민국 외교 당국은 면밀한 분석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집중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주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물론 정북 정치권에도 측각이 곤두서고 있다. 이상직 의원은 그동안 횡령, 배임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자신이 검찰 탄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동료 의원들도 당할 거라고 호소했다. 결과는 압도적으로 체포 찬성 의견이 많았다. 그는 회사에 430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40억 원 넘게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의 체포 동의안 표결에 앞서 그는 검찰의 오만한 탄압이라고 호소했다. 동료 의원들도 똑같이 당할 거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소용은 없었다.

그는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 참을 수 없는 처우와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결과는 259명 투표에 찬성만 206표였다.

야당은 물론이고 이상직 의원이 몸을 담았던 민주당도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이 의원은 앞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딸이 탄 1억원 짜리 포르쉐는 교통사고 경향이 있는 딸의 안전을 위해 회사 돈으로 리스한 것이었다는 해명을 내놔 부메랑이 됐다.

민주당은 불공정에 대한 엄중한 질책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이 의원과 선을 그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처리된 두 명이 모두 민주당 출신이라고 꼬집었다.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상직 의원 구속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은 불사조 이고 불사조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이스타항공 노조가 밝혔다. 왜 일각에서 사립귀정(事必歸正)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알아야 할 때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런던서 시위하는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시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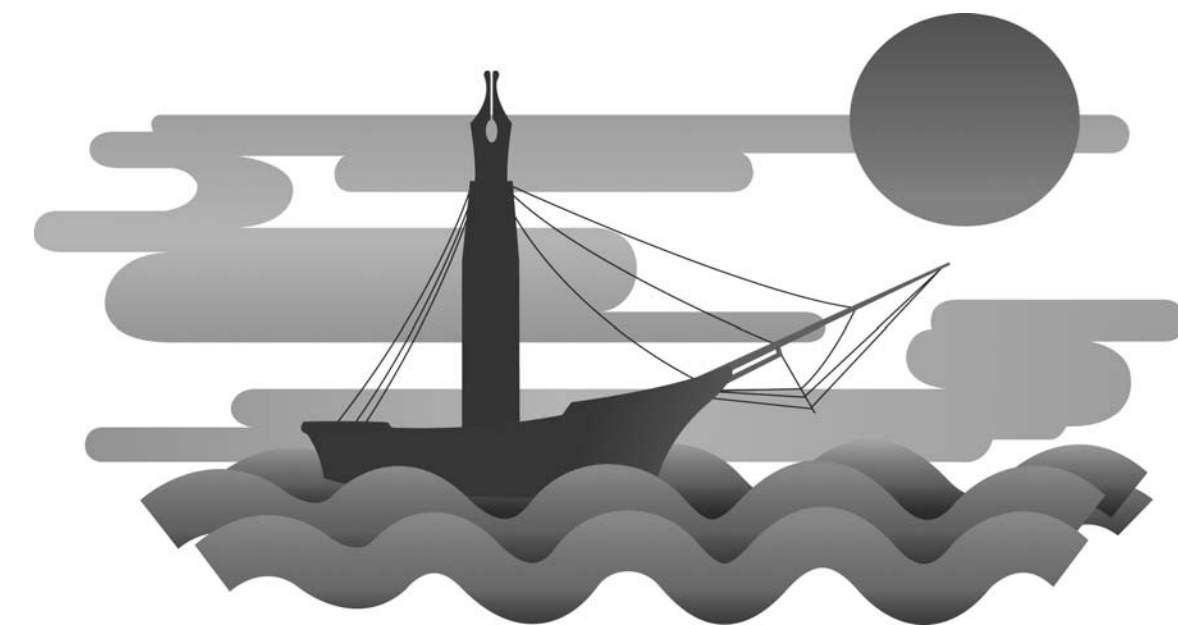


2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트래팔가 광장에서 시위대가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지역의 깃발을 흔들며 티그라이 지역에 대한 에티오피아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가 지난해 11월 법치 회복 등을 내세워 티그라이에서 군사작전을 감행해 집권 정당 '티그라이인민해방전선(TPLF)' 축출을 시도하면서 티그라이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카네이션 혁명 47주년, 카네이션 손에 쥐어 가기



25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카네이션 혁명(리스본의 봄) 47주년 기념 퍼레이드가 열려 엄마 품에 안긴 한 아이가 카네이션을 쥐고 있다. 1974년 독재 정권을 전복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카네이션 혁명 47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수천 명의 사람이 리스본 중심가에서 퍼레이드를 펼쳤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